

## [ 종합·해설 ]

광주고법·지법, 광주고검·지검, 노동청, 영산강환경청 국감

# “광주 청년실업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민주당)는 14일 광주에서 광주고법·지법, 광주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주미애·민주당)도 이날 광주지방 노동청에서 광주지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광주고법·지법

광주 고·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학소심 판결과 국선 전담변호인 실효성 논란, 신중한 영장 발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예 변론을 거절하는 사례 등 충실히 변론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전국에서 활동중인 82명의 국선 전담변호인 중 광주의 경우 2명에 그치고 있고, 국선 전담변호 비율은 6.4%에 불과함에 이렇게 유명무실한 국선 전담변호인 제도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은 “전자우편 암수수색의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전자우편 및 계좌주적 등의 암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은 “광주 인화학교 학소심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은 “국선 전담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판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신중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고검·지검

검찰이 공소제기한 중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거론된 중요 사건은 강운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신정훈 나주시장의 국가보조금 부당지급 사건, 1천억원대 광통신 핵심 기술 유출 사건 등이다.

박영선(민주당)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이뤄진 무죄판결을 국민 시각에서 보면 ‘검찰이 무분별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1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 등 광주고법 관내 각급 법원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원쪽부터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북 AI 매몰지역 지하 수질 나빠

## 전남 폐광산 주변 5곳 환경오염 심각

신중한 수사를 당부했다.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은 “‘돈 선거’ 의혹을 낳은 강 의원이 무죄 판결은 받은 점은 법원의 면죄부상 판결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지적해 면죄부상 판결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잇따른 무죄 판결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자체에 흠집이 생긴 것은 분명한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윤근(민주당) 의원은 “확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과오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희철 광주지검장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우연히 강 의원과 신 시장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를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호남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정하면서도 청년 및 고령자 실업 문제, 노사갈등, 산업재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화수(한나라당) 의원은 “광주·전남·북 50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만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고용정책이 절실하지만 광주청의 취업지원 사업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열린 실버박람회의 취업자는 31명인데 예산은 4천 만원이나 들어갔다”고 질책했다.

조해진(한나라당) 의원은 “을상반기 광주지역의 청년실업률은 10.3%로 전국 평균(7.4%)보다 2.9%나 높다”며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청년층과 기업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의덕(민주노동당) 의원은 “지역 대표기업인 포스코에서 사내 하청업체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기업별 노조 전환, 산업평화 선언 등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다는 근거들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권영순 광주지방노동청장은 “관내 전체 기업 중 70%가 직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일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졌지만 구직자들은 반대로 대우가 좋은 직장만을 고집하고 있어서 실업률이 높은 것 같다”며 “맞춤형 취업정책을 추진하고, 산재와 노사갈등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입하겠다”고答했다.

의원들은 주로 조류독감(AI) 매몰

## 영산강유역환경청

## “불심 달래기 검사 동원 부적절”

### ■ 국감 이모저모

거나 박 지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포스코 하청 노조 문제 설전

○…14일 열린 광주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간부들의 ‘불심 달래기’를 놓고 야당 의원과 검사장이 한때 임씨름을 벌였다.

법사위 박영선(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전북 청장을 내장사 방면에 일선 검사장들이 동행한 것과 관련, “불심 달래기에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가 동원됐다는 국민의 시각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나”라고 지적했다.

이준보 광주고검장을 “전북도와 법질서 확립 협약식을 갖고 광주고검 관내 검사장 등 6명이 휴식 차원에서 1박하고 내장산에 올랐을 뿐 불심 달래기 차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고검장의 해명에 불구하고 “검찰의 ‘과잉충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쏘아붙였고, 이 고검장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 ‘병풍’ 사건 인사 놓고 고성

## 태양광발전 난개발 비판

○…이른바 ‘병풍’ 사건을 맡아 편파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박영관 제주지검장의 ‘좌천성 인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도 벌어졌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질의가 끝난 뒤 추가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주를 방문했을 때 당시 전주지검장이던 박영관 지검장과 처음 대면했다”며 “그런데도 2002년 대선 당시 서울지검 특수 1부단장이던 박 지검장에게 누군가 특별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병풍’ 사건의 편파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나는 것을 보고 ‘피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희창 후보자 자녀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에 압력을 행사하

○…영산강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와 영산강유역환경장에 대한 매서운 비판으로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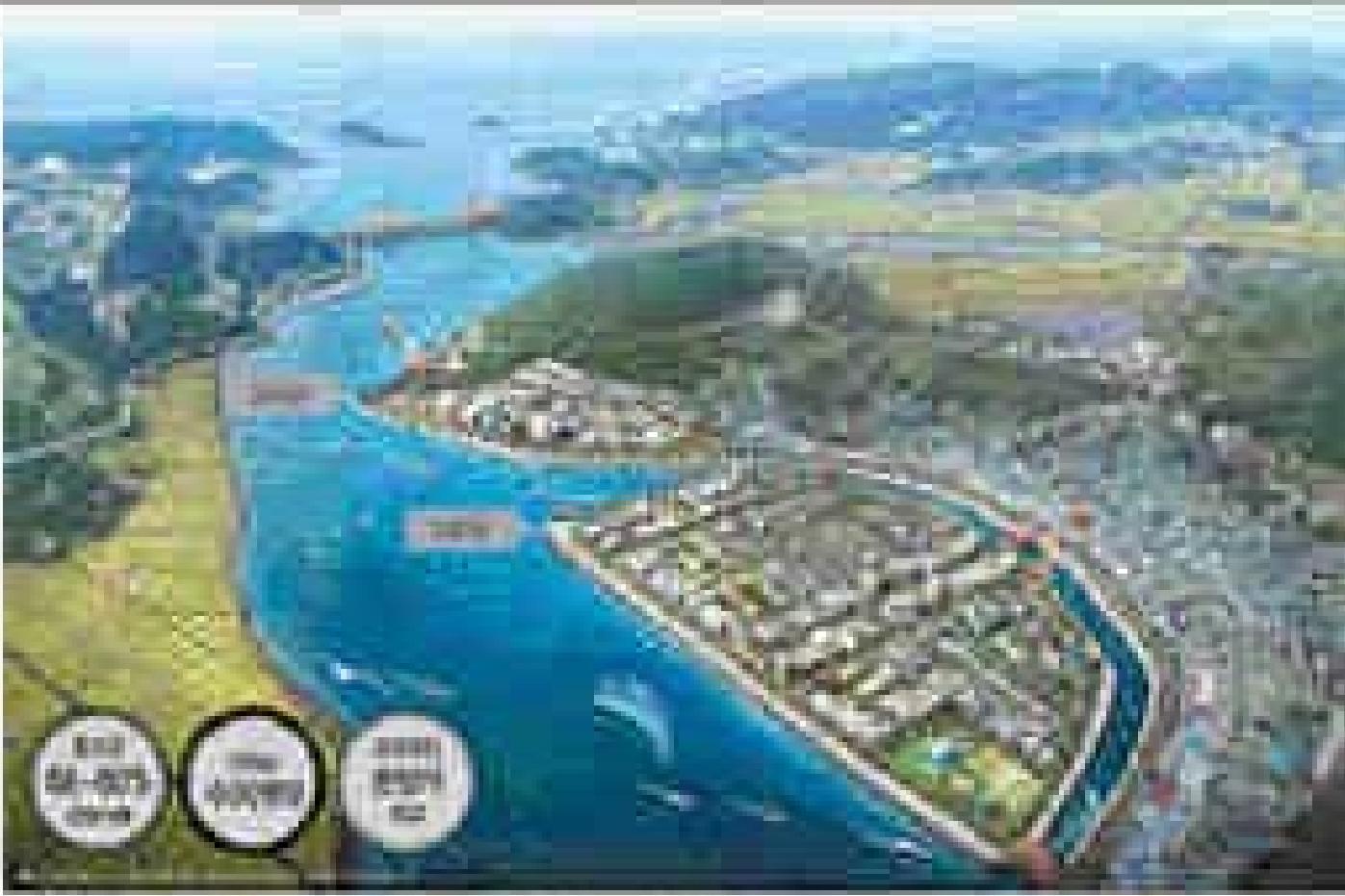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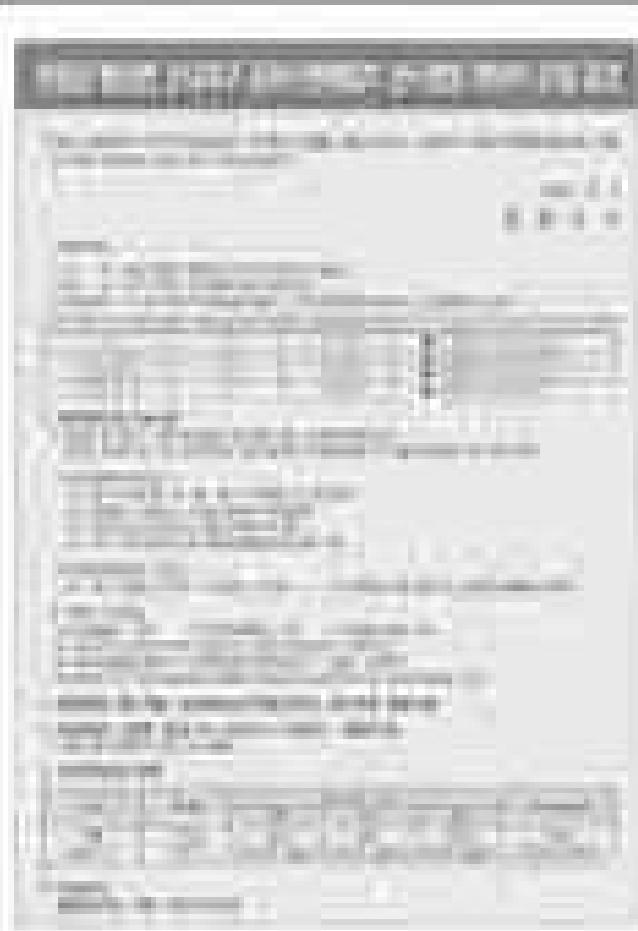
조 의원은 최용철 영산강유역환경장에게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 업체 수를 질문했다. 하지만, 최 청장은 “허가를 몇 군데 한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곳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조 의원은 “어떻게 청장이 최대 현안사업 내용도 모를 수가 있는가. 전남·북이 전국 업체 중 62.7%나 차지할 만큼 많은데 가동 중인 곳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는 “박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나는 것을 보고 ‘피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희창 후보자 자녀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에 압력을 행사하

/최권일·인현주·강필상기자 cki@

# 【영광군청 시행】 뉴법성포항 영광글비타운 상업용지 분양공고



영광글비타운의  
5대 프리미엄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를  
자신합니다!

■ 영광군 행정사무처 ■ 영광군 행정복지센터 ■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061) 356-5155